재계는 찬성하고 FTA 민간대책위원회의 한-EU FTA 체결지원 사절단 대표 이희범 무역협회장(오른쪽)과 필립 드 벅 비즈니스유럽 사무총장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쉐라톤 호텔에서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반대 한-EU FTA에 반대하는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총, 낙농육우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협상장인 벨기에 브뤼셀 쉐라톤 호텔 앞에서 한-EU FTA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상품 양허안' 등 민감사안 첨예 대립

■ 韓-EU FTA 3차협상

韓 "관세 조기철폐율 EU보다 높다"
EU "韓-美 FTA 수준도 안돼 실망"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다. 1,2차 협상까지 서로 이해하거나 상대 측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는 모양새였지만 3차 협상에서는 첨예한 대립각 속에 팽팽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희망을 고려한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제외한 부문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들을 이끌어 내야하지만 기대만큼 수월한 협상이 이뤄지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3차 협상이 전체 협상 속도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EU, 서로 "실망" 공방=17일(현지시간) 진행된 3차 협상 첫날 양측의 입장은 '서로 실망했다'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우리측 수정양허안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준비된 발언문까지 생략하고 EU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2차 협상까지 기존의 우리 측 양허안 수준이 EU 측 안보다 뒤진다고 인정하고 양허안을 수정해달라는 EU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양측이 이처럼 상품 양허안에 집착하는 것은 전체 협상에서 상품 양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체적인 양허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과 함께 전체 협상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U 측의 주장은 우리 측 수정안을 놓고 볼 때도 자신들의 관세 조기(즉시+3년 이내)철폐율이 관세 및 무관세 품목을 모두 포함한 수입액 기준으로 79%에 달해 우리 측의 68%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 포도주와 위스키, 돼지고기, 치즈, 초콜릿 등 한국의 민감성을 고려해도 한국 측이 자신들에 제시한 양허안 수준이 한·미 FTA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측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까지 포함하면 안되고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만의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 조기철폐비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관세가 되고 있는 품목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측의 조기철폐율이 58%로 EU의 56%보다 높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의 경우 EU의 요구대로 명확한 개방안을 제시했고 애초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양측 간 양허 수준의 균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재계 장외 대결=FTA를 반대하는 양측의 시민단체와 FTA를 지지하는 재계의 장외 대결도 시작됐다.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3차 협상이 진행 중인 브뤼셀에 '한-EU FTA 체결지원단'을 보내 유럽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과 합동회의를 개최한 뒤 "FTA 체결은 양측의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공동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민노총,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이 주축이 된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한-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장인 브뤼셀의 쉐라톤 호텔 바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원정투쟁에 나섰다. /브뤼셀=연합뉴스

美 " FTA, 페루-콜롬비아-파나마-한국順 체결 희망"

수전 슈워브 미국 통상대표부(USRT) 대표는 1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페루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미상공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의회가 페루와 FTA 체결을 위한 신속협상권 심사와 승인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며 "의회의 FTA 승인절차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페루와의 FTA를 10월 중순께 비준에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日 자민당 25일 총리 지명…신 내각 발족

오는 23일 새 총재를 선출하는 일본 자민당은 25일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한 뒤 당일 새 내각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또 28일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새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을 실시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3일간 각당 대표질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야당측과 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간사장이 맞대결한 자민당 총재선거는 23일 투개표를 앞두고 두 후보자가 합동 가두연설에 나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띤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당 소속 중참 양원의원 387명과 지역 대표 141명 등 총 528표 가운데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자가 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후쿠다 후보가 당내 파벌들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 공교육비 OECD국중 1위

GDP 대비 7·2% 달해…대졸여성 취업률 '꼴찌'
대학 등록금 3위, 교원·학급당 학생수 최고 수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4년 기준)은 7.2%(정부 4.4%, 민간 2.8%)로 OECD 평균 5.7%(정부 5.0%, 민간 0.7%)보다 크게 높고 특히 민간(학부모)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2.8%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OECD 최고로 기록됐고 핀란드 0.1%, 독일 0.9%, 일본 1.0%, 미국 2.3%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했다.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도 초등 22%, 중등 33%, 고등 34%로 OECD 평균(초등 20%, 중등 25%, 고등 40%)을 대체로 상회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 지출액은 초등 4천490달러, 중등 6천761달러, 고등 7천68달러로 집계됐다.

국공립대 평균 수업료(4년제 기준)는 PPP 기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과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4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사립대 수업료의 경우 미국 1만 8천604달러로 가장 높고 한국은 OECD 국가중 5위를 차지했다.

2003년도 OECD PISA(OECD 주관 학업성취도 조사)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를 차지했다.

만15세 학생들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기대 수준은 78.3%로 OECD 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34세 남성 취업률은 86%로 OECD 평균 82%보다 높으나 여성은 57%로 OECD 평균 63%보다 6% 포인트 낮았으며 대졸 여성의 경우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취학률은 15~19세, 20~29세에서 각각 85.6%, 27.3%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4세 이하(22.5%), 5~14세(94.1%), 30~39세(2.0%), 40세 이상(0.5%)은 비교적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2.6명, 중학교 35.7명으로 OECD 평균(21.5명, 24.1명)을 크게 웃돌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중 가장 많다.

25~64세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대졸자 임금은 고졸보다 남성은 38%, 여성의 경우 거의 두배로 높아 대졸과 고졸간 임금 격차가 심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前 6자회담 가능할까

내주 초 개최 바람직…北 '몽니' 파악 분주

차기 북핵 6자회담 개최가 당초 확정적이었던 19일에서 뒤로 밀리게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10.2~4) 개막전에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자회담이 반드시 정상회담 전에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이 연기됐을 때 '전화위복'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데 이어 차기 6자회담이 최소한 정상회담 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로드맵이 작성될 경우 남북 정상이 한결 우호적인 한반도 정세 아래 평화체제 문제,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안보에 직결되는 두 중대 이벤트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 역시 여러모로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내주 초인 24~25일께 6자회담이 시작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차라리 정상회담 이후에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국자들은 비상상황에 놓인 듯 한 모습이다.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요즘처럼 6자회담이 잘 돌아가고 있는 터에 북한이 회담 개최 시기를 두고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정확한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느라 속을 태우고 있다.

어쨌거나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 영향력을 행사, 북한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회담장 테이블에 앉도록 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美, 北 마약 수출국 삭제
테러지원국 제외 연계 주목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연례 마약활동 평가 발표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7일 각국의 불법 마약활동에 대한 평가서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의 마약관련 불법행동을 우려한다는 언급을 삭제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평가에선 "2004년 이후 북한과 연계된 마약 압류나 마약밀매자 체포는 전혀 없었으나 국가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명시했었다.

지난해 평가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불법활동 개입을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평가서에선 이런 언급들이 모두 삭제된 것. /워싱턴=연합뉴스